

# 기호 7

공약순위 1 : 재벌국유화·국가투자은행설립으로 공공경제 실현

- 목표
  - 기후정의실현·산업전환·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로 사회적 필요충족을 위한 경제체제 구축
  - 공시대상 기업집단 (재벌) 국유화
- 이행방법
  - 국가투자은행 설립
    - 기후정의실현을 위한 투자, 사회적 필요충족을 위한 인프라 투자
    - 국가책임일자리, 기후일자리, 가사·돌봄일자리 전면 확대를 위한 투자
    - 재벌과 독점기업 국유화 지원
  - 총수일가 소유지배 해체와 재벌국유화 추진
    - 금융법 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, 대기업으로 적격성 심사 확대
    - 순환출자금지,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기존 공정거래법 상 규제강화
    - 일감몰아주기, 자사주를 활용한 지분확대 목적의 기업분할 등으로 확보한 총수일가 지분소각
    - 부당하게 축적한 총수일가 자산 환수
  - 공적자금 투입기업 공영화
    - 구조조정 기업 공영화 추진
    - 기간산업 국유화 전담기구로 공영화 지원
  - 국가기업운영위원회-국유자산감독위원회 설치
    - 국가기업운영위원회 설치로 기업·산업 경제계획과 사업운영 심의
    - 주요 기업 산업정책·탈탄소정책·노동정책 계획·집행·감독
    - 국가기업운영위원회 구성
      - 기업단위 운영위원회: 지역사회, 노동자 대표 등 관계자들로 구성
      - 기업운영위-지역기업운영위원회-국가기업운영위원회 상향식 구성

- 국유자산감독위원회로 공적 소유지배구조 안정화
  - 국유자산 공적 관리
- 이행기간
  - 2022-2027
- 재원조달방안 등
  - 연간 국가재정 1,000조원 확보로 국가투자 확대
    - 누진소득세로 통해 국세수입 확대 : 350조원에서 600조원으로 증대
      - 소득세 현행 최고세율 45%를 80%로 상향 : 누진소득세 실시
      - (소득세 확대에 비례해) 법인세 최고세율 25%에서 45%로 확대
      - 주식 및 채권 평가이익 과세, 종합소득세로 일원화
      -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대폭 인상
    - 재벌·독점기업 독점이윤 및 사내유보금 환수 : 연간 100조원 내외
    - 세제개혁 및 기타 새로운 재원 확보 : 50조원

공약순위 2 : 1,000만 국가책임일자리로 완전 고용

- 목표
  - 일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권리로서 양질의 영속적인 일자리 보장
    - 중위소득 및 평균노동시간으로 구성된 양질의 영속적 일자리
  - 국가책임일자리 1천만개 확보, 노동시장 사회화
    - 전체 고용량 2,000만개 일자리 중에서 국가책임 일자리 1,000만개 공급
    - 민간노동시장 저임금·장시간일자리 규율·퇴출로 불안정노동체제 청산
    - 비정규직 철폐, 성별 임금격차 해소
  - 국가책임 완전고용 법제화
- 이행방법

일자리 내역	수량	비고
국가책임 기후일자리	80만	전력·에너지 부문, 탈탄소 생산부문
산업전환 공영화 일자리	80만	디지털전환 및 산업전환 국가신규투자
재벌 사회화 일자리	120만	기존 100만(10대재벌) + 신규 창출 20만
기존 공공부문 확장	33만	보건의료, 교육, 사회복지 등 인력 확충
민영화 부문 재공영화	20만	전력·교통·통신 등 민영기간업체 공영화
현행 공공부문 일자리	260만	일반정부 222만 + 공기업 38만
가사노동 사회화 일자리	190만	· 식품, 요리, 가사 자영업 150만 사회화 · 가사서비스 시장 노동자 재고용
돌봄 사회화 일자리	117만	· 영유아 돌봄 190만 가구, 노인돌봄 150만 가구, 장애인 돌봄 10만 가구 기준 · 기존 돌봄 노동자 재고용
이동·배송 일자리	50만	플랫폼 노동 사회화
영양사 및 안전 일자리	50만	가사돌봄 재생산 관련 영양 및 안전관리
총 계	1,000만	

- 이행기간
  - 2022-2027
- 재원조달방안 등
  - 국가재정을 OECD 수준에 따라 GDP의 50%, 1,000조원까지 확대

### 공약순위 3 : 전 기업 탄소배출 감축의 무제로 기후정의 실현

- 목표
  - 기후정의 실현
- 이행방법
  - 기업 탄소배출 감축의무 전면확대
    - 현행 197개로 제한된 기업 탄소배출감축의무 전면 확대
    - 탄소배출권거래제 폐지로 탄소배출 감축 강제
    - 에너지 생산·전달·소비과정 사회적 통제 법제화, 5년간 7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다소비기업 전기요금혜택 폐지
  - 녹색성장기본법 폐지와 기후정의기본법 제정, 기후정의위원회로 기후정의 대중운동과 사회적 권력 형성
    -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% 이상으로 법제화

- 재벌과 에너지자본을 위한 ‘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를 노동자·농민·여성·청년 등이 주도하는 기후정의위원회 또는 기후정의국민의회로 대체
- 기후정의를 위한 대중운동 형성, 기후정의를 위한 사회적 권력 형성
- 산업별 탄소배출 감축 의무 부여
- 기후예산 편성 및 집행권
-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대중운동, 기후정의총파업
  - 기후위기 주범,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총파업 조직운동 전개
  - 국가와 자본에 맞선 노동자민중 주체의 정의로운 전환
- 기후위기 가속하는 반생태 사업 중단
  - 가덕도 신공항 건설중단
  -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·기존 석탄화력발전 조기폐쇄·핵발전 중단
- 이행기간
  - 즉각 추진

#### 공약순위 4 : 읍면동 공공가사돌봄센터로 국가 책임 돌봄사회

- 목표
  - 사회서비스 시장화로 개인과 가족에 맡겨진 가사·돌봄 공영화
  - 모든 가사·돌봄 노동자 국가책임 직접고용
  - 사회서비스 공영화
- 이행방법
  - 공공사회서비스기본법제정
    - 돌봄·보육·가사 등 사회서비스 공급책임을 공공으로 전환
    - 사회서비스기관 국가-지방정부 직접운영 명문화
    -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조장하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폐지
  - 국가책임사회서비스원(공단)·공공가사돌봄센터 설립
    - 공공사회서비스기본법과 함께 전국기초지자체에 공공가사돌봄센터 설립
    - 가사노동을 돌봄노동과 함께 사회화, 가정과 개인에게 전가되는 양육과 가사 노동에 대한 사회적 분담·공급체제 구축

- 가사노동 관련 서비스 업종의 사회화, 공적 공급체계 구축
-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공영화: 지자체에 따라 단기간 내 공영화 어려울 경우 위탁계약 종료 사업부터 공영화
- 어린이집·요양시설 전면 국공립화
  - 보육·요양은 국가의 책임인바, 모든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을 공영화함
- 사회서비스 공영화로 사회서비스노동자 노동권 보장
  - 보육·가사·돌봄노동자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폐지
  - 공공책임 사회서비스 노동자 직접고용으로 노동권 보장
- 이행기간
  - 5년 단위로 추진하면서 그 결과를 이후 계획에 반영함
- 재원조달방안 등
  - 국가재정을 OECD 수준에 따라 GDP의 50%, 1,000조원까지 확대

#### 공약순위 5 : 민간임대 금지·공공주택 1,000만 호로 공공주거 실현

- 목표
  - 공공주거 실현
- 이행방법
  - 민간임대 금지와 공공주택 1,000만호 보장으로 공공주거 실현
    - 국가책임 공공주택 공급의무 법제화, 민간임대 금지
    - 공공 선매권제도로 주택매도 시 공공 우선매수. 공공주택 확대
  - 다주택소유금지와 국유토지 확대
    -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금지
    -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,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
    - 택지소유 상한제 실시
    -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공공택지화
    - 공공택지 분양금지와 공공개발
  - 불로소득 차단

- 개발이익 완전 환수 (토지초과이득세 도입)
  - 종합부동산세 확대
- 주택소유 없이도 노후생활 보장
  - 공공주택 보급으로 주거안정성 확보
  - 의료·간병 등 노후 기초생활 보장
  - 노인 기초연금 대폭 인상
- 이행기간
  - 2022-2027
- 재원조달방안
  -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으로 개발이익 완전 환수
  - 종합부동산세 확대

#### 공약순위 6 : 의료·교육·교통·통신·에너지 공영화로 공공복지 실현

- 목표
  - 보건의료 공영화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
  - 공공대학체제 구축으로 무상교육 실현
  - 통합공공교통체제로 보편적 교통권 보장
  - 통신산업 공영화로 통신공공성 확대
  - 공공에너지체제로 에너지복지 보장
- 이행방법
  - 의료공영화
    - OECD 평균수준 공공의료기관·공공병상 확대(공공병원 50%, 공공병상 70%)
    -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관리청 신설, 공공의료 통합운영·지원체계 수립
    - 17개 광역시·도 2개 이상 공공병원 확보,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 없는 24개 권역에 1개 이상 공공병원 확보
    - 검역인력과 역학조사관 확충
    - 공공의료인 양성과정 신설
    - 백신과 치료제의 공공개발

- 공공주치의 제도로 도입으로 1차 의료 강화. 포괄적 공영의료서비스 도입. 일차 의료센터-병원-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포괄적 지역공공병원체계 구축
  -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조사 면제
- 입시폐지와 공공대학체제 구축
  - 수능 폐지와 ‘대학입학 자격고사’ 실시, 학교의 학생선발권 폐지
  - 모든 국공립대를 대학통합네트워크로 통합해 공공대학 체제 구축
  -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학의 공영형 사립학교 또는 국공립대학 전환으로 고등교육 공영비율 50%까지 우선 확대
  - 대학통합네트워크 지방캠퍼스 전략적 국고지원으로 대학 서열폐지
  - 대학통합네트워크부터 등록금 폐지, 대학교육 무상화
- 전 지역 통합교통공사 설립
  - 기초-광역자치단체 공공교통수단 통합 공영화
  - 버스완전공영제와 택시완전월급제 시행
  - 지하철-버스-마을버스 공영화에 기반해 통합공공교통체제 구축
  - 광역교통청 설립으로 도시간 교통체계 통합 재편
  - 공공교통 국가투자 확대, 지역 공공교통 적자 국비지원
  - KTX-SRT 재통합
- 통신산업 공영화
  - 유무선통신 공영화로 중복투자와 홍보비 과다지출 방지
  - 기본료 폐지와 사용료 대폭 인하
- 공공에너지체제로 에너지 복지 확립
  - 전력산업 통합공기업 설립으로 공공에너지 체제 구성
  - 에너지복지법 제정, ‘에너지 빈곤층’ 개념 명시, 빈곤층 에너지 무상공급
- 이행기간
  - 5년 단위로 추진하면서 그 결과를 이후 계획에 반영함
- 재원조달방안 :
  - 국가재정을 OECD 수준에 따라 GDP의 50%, 1,000조원까지 확대

## 공약순위 7 : 여성차별·폭력·없는 사회, 성·재생산권리 보장

- 목표
  -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고,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를 건설함
- 이행방법
  -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 재정립
    - 비동의 강간죄 제정 (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)
    -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조항 폐지
    - 가해자 중심 사법체계 전면 개혁
    - 전국 지자체에 성폭력대응 기관 마련 (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성폭력 사건 해결기구 설치, 가해자 즉각적인 업무정지 등)
  - 피해자 지원조치 강화
    - 실질적 피해자 회복지원체계구축 (의료·법률지원, 고용유지, 소득보장, 디지털 정보 삭제)
    -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전국으로 확대
    -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
  - 성폭력 예방조치로서의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
    - 전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으로 포괄적 성교육 실시 (30인 미만 사업장 예외 없이 적용)
    - 초·중·고·대학까지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
    - 고위공직자 임명시 반성폭력 교육 의무화
  - 온전한 재생산 권리보장
    - 성재생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
    -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,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지정, 임신중지시술 의료보험적용
    - 근로기준법 유산·사산휴가 적용범위에 임신중지 포함
    - 태아산재법 일터 적용 안착화, 태아산재법 개정 보완 (아버지 태아산재 인정, 소급적용기한 확대, 보험급여 확대)
    - 이주·장애여성 배제 없는 지역재생산권리센터 구축
    - 장애인시설 재생산권리침해 실태조사



- 청소년 피임접근권 확대
-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공급

#### 5. 현행 가족중심 법제도 전면개편

- 여성가족부 성평등부로 개편과 역할 강화(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, 젠더평등 정책 현실화)
- 생활동반자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

□ 이행기간

- 2022-2027

#### 공약순위 8 :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사회

- 목표
  - 성소수자·장애인·청소년·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
- 이행방법
  -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
    - 성별, 장애, 나이, 언어, 출신국가, 출신민족, 인종, 국적, 피부색, 출신지역, 외모, 혼인여부, 임신 또는 출산, 가족형태, 종교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 전과, 성적지향, 성별정체성, 학력, 고용형태, 병력 또는 건강상태, 사회적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제도화
  - 성소수자·장애인·청소년·이주민 차별철폐
    - 성소수자의 노동권, 가족구성권, 양육권 등 온전한 제 권리 보장
    -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, 탈시설자립생활권 보장,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
    - 16세 선거권·정치결사권·정당활동 등 청소년의 정치적·사회적 권리보장
    - 청소년 노동3권 보장
    - 고용허가제 폐지, 이주민에 대한 온전한 사회보장제도 적용, 미등록 이주민 폭력단속 금지
    - HIV감염인의 인권·평등권·프라이버시권 침해하는 에이즈예방법 19조 폐지

####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

- 동성혼 법제화
  - 결혼제도 밖 가족공동체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제도·시민결합 법제화
  - 사실혼 가구 동등한 권리보장, 사실혼 및 실질적 가족구성 인정요건 간소화

- 성소수자 가족구성원에게 차별 없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
- 포괄적 성교육, 성별 이분법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중심 교육과정 전면개편
- 성소수자인권교육 의무화 및 성소수자인권교육표준안 마련
- 교원·교원양성기관 성소수자 인권교육 의무화
- 성정체성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

○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

- 동성혼 법제화
- 결혼제도 밖 가족공동체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제도·시민결합 법제화
- 사실혼 가구 동등한 권리보장, 사실혼 및 실질적 가족구성 인정요건 간소화
- 성소수자 가족구성원에게 차별 없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
- 포괄적 성교육, 성별 이분법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중심 교육과정 전면개편
- 성소수자인권교육 의무화 및 성소수자인권교육표준안 마련
- 교원·교원양성기관 성소수자 인권교육 의무화
- 성정체성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

○ 국가책임 장애인 기본권 보장

- 장애서비스 공영화로 탈시설 자립권 보장
  - 탈시설 권리를 포함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개념 재정립
  -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지자체별 장애인위원회 신설, 자립지원체계 구축
  - 장애보험 신설로 OECD 평균 이상 장애인권리예산 확보
  - 권리중심 사회보장 강화, ‘장애인기본법’ 제정 추진
  - 국가장애서비스공단 활동지원사 직접고용
  -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, 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전면 폐쇄

○ 장애인 노동권 보장

-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, 안정적 고용과 4대보험 등 노동권 전면보장
- 재활 중심 보호작업장 폐지 및 국가책임 권리중심일자리로 재고용
- 현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 자리를 국가책임 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로 전환, 4만개 이상 신설

○ 장애인 교육권 보장

-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개정,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

-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경쟁교육 폐지로 실질적 통합교육 실현
  - 특수학급의무화, 통합교육지원인력 증원, 장애인교원확대, 교육지원인력 증원
- 장애인 이동권 보장
  - 저상버스 도입 국가예산 확대
  - 통합교통공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이동권 차별철폐
  - 1역사 2동선 도입
  - 통합교통공사 직접운영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으로 특별교통수단 공공운영
  -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중증장애인 75명당 1대 의무 확보
- 이행기간
  - 2022-2027

#### 공약순위 9 :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, 한반도 비핵지대화

- 목표
  - 평화조약 체결, 핵무기금지조약 가입과 비핵지대화로 평화체제 수립
- 이행방법
  -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
    - 상호불가침·국교정상화·한미동맹폐기·주한미군철수·북핵폐기 명시
    - 대대적 군축, 항공모함 등 광역최첨단무기 운영 중단과 북의 상응조치 추진
    - 체결주체는 남·북·미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 추가
  -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즉시 가입
    -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즉시 가입
      - 모든 핵무기 개발·실험·생산·보유·사용·핵우산금지하는 조약으로 현 50개국 비준, 2021년 1월 22일부터 발효
      - 현재 공인·비공인핵무장국은 물론 미국 핵우산 보호국도 조약에 가입하지 않음
    - 공인·비공인 핵무기 보유국을 망라해 '핵무기 폐기 프로그램' 요구
    - '핵에너지 포기프로그램'을 핵무기 폐기 프로그램과 병행 추진

-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조약 동시 이행
  - 비핵국가 핵무장 포기, 미국·러시아·중국의 동북아 비핵국가 핵공격 금지, 핵우산 제공 금지를 내용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 조약 추진
  - 전 세계 비핵화 및 동북아 비핵지대화 동시 진행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 조건 구축
  - 북핵, 미국의 핵우산과 선제 핵공격 훈련 동시 폐기
  - 한반도 내 핵무기 개발·보유·수송·훈련 금지
- 이행기간
  - 2022-2027
- 자원조달방안 : 별도의 자원 필요 없음

공약순위 10 : 정당법 폐지, 교사·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

- 목표
  - 노동자 민중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
  - 교사·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
- 이행방법
  - 정당법 폐지
    - 미국, 영국, 프랑스, 일본 등 주요국은 정당요건을 강제하는 정당법 자체가 없으며, 선거 참여 정치단체에 대한 별도규정이 있을 뿐임. 독일 역시 정당을 보호하고자 정당법을 둬
    - 한국 정당법은 정당요건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규정해 민중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제한
  - 교사·공무원 정치활동을 금지·제한하는 법제도 폐기·개정
    - 교원노조법·공무원노조법 폐기
      - △노조설립 특례 규정 △해고자 조합원 자격 배제 △정치활동 금지 △단체협약 효력범위 제한 △쟁의행위 금지를 명시한 현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폐기
      - 교원노조·공무원노조 특별법 폐기와 일반 노조법 적용
    -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

- 현 국가공무원법·지방공무원법·정당법·선거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△정치적 의사표현 금지 △정당가입과 후원금지 △입후보 제한 등을 명시
  - 관련 법률 전면 개정·폐기
- 이행기간
  - 즉시입법을통해실행함
- 재원조달방안 등
  - 별도 재원이 필요 없음